

광주시, 지역노동계 불신 해소 나서라

/ 뉴스초점 / '광주형 일자리' 되살리려면

합작법인의 '노사상생협의회 결정사항의 유효기간'을 둘러싼 마찰로 무산 위기에 봉착한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 공장 설립사업' (이하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광주시가 먼저 지역노동계를 설득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제2투자자인 현대자동차가 합작법인의 지속가능성과 경영 안정을 위해 이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제1투자자 자격으로 시민 협세를 투입하고 추가 투자를 이끌어야 하는 광주시 역시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합작법인 운영주체인 광주시가 완성차 공장을 설립·운영해 성과를 낸 뒤에는 임직원과 공유하는 방안을 마련해 이 시안을 정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노사상생협의회 결정사항의 유효기간'을 '임금 협상 유예'로 받아들이는 지역노동계를 상대로 '합작법인 운영 성과의 공개 및 공유'를 약속함으로서 '임금 인상을 억제하려 한다'는 오해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11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6일 광주 노사민정협의회가 노사상생발전협정서 제1조 2항의 삭제 또는 수정을 결의한 뒤 광주시가 현대차와의 재협상을 나서지 못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이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염원하는 목소리를 내고, 서명서까지 받아 이용섭 광주시장에게 전달했지만 별 다른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 시장 역시 협상팀 단장을 맡기로 하는 등 전향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현대차의 신뢰를 얻기에는 역부족인 상태다.

이에 따라 광주시가 현대차를 상대로 광주노사민정협의회 결과 수용을 요청하기보다는 합작법인의 초기 임금 협상 유예를 우려하는 지역노동계의 불안감을 불식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자동차 기업인 현대차가 광주시와 현대차, 금융기관 등으로 합작법인을 구성해 자동차 공장을 운영하는 것은 이번이 최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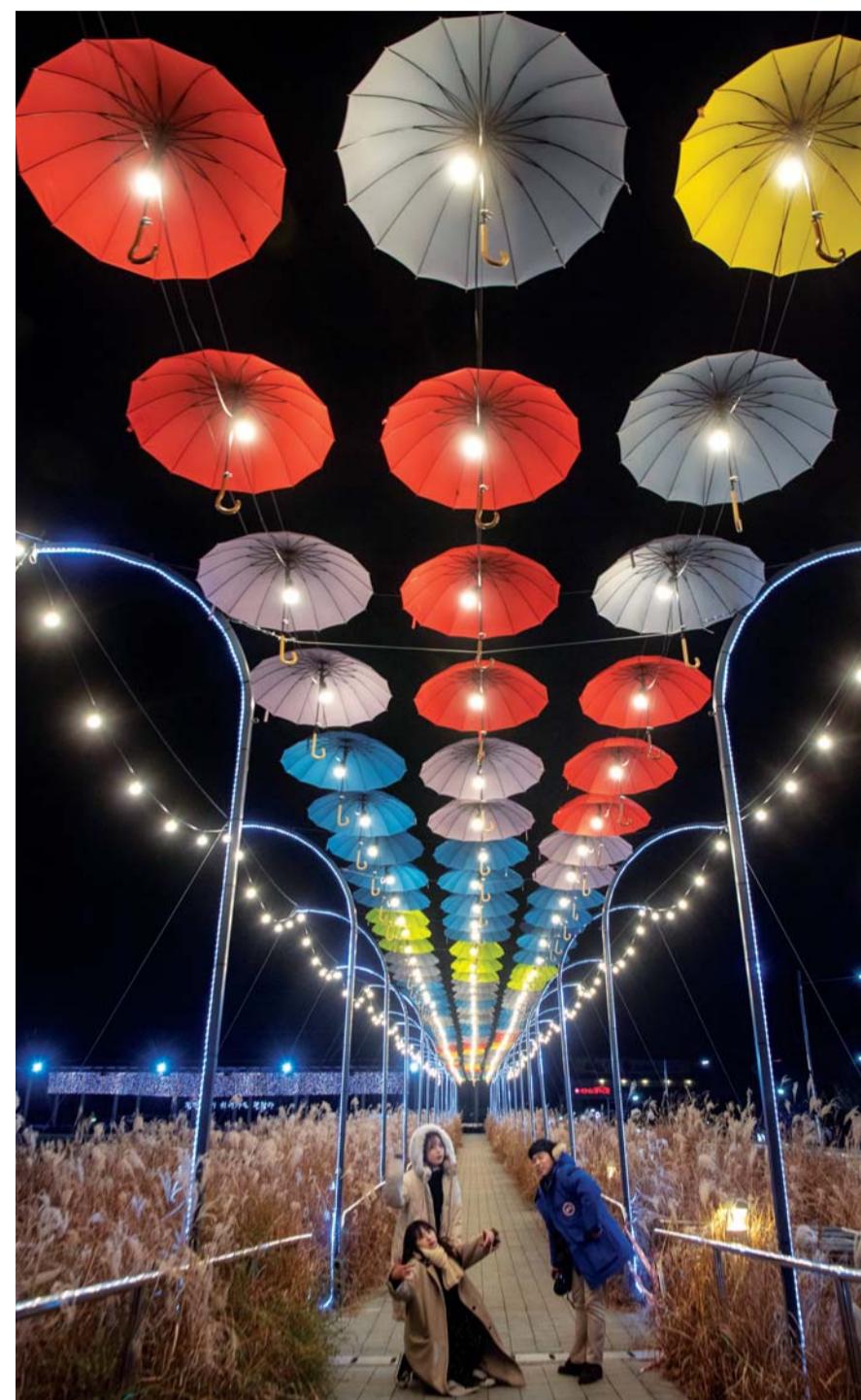
운영 성과 공유할 방안 찾고
경영 안정·지속 가능성 우선
투자자 현대차 입장 수용을

의 사례로, 조기 경영 안정을 위해서는 자동차 생산·판매의 노하우를 지닌 현대차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2투자자이자 생산 위탁기업인 현대차가 단순한 임금 억제 측면이 아닌 합작법인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지속가능성에 중점을 둔 만큼 시민 협세, 국비 등을 투자하는 광주시가 이를 임종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이와 함께 광주시는 합작법인의 경영이 안정되고 그에 따라 수익이 창출되면 이를 광주시민에게 공개하고 임직원과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시스템을 구축해 지역노동계가 우려하고 있는 임금 인상 억제의 불안감을 점진적으로 해소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임금 협상 유예가 현 노동법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운영주체인 광주시가 합작법인의 운영 과정에서 지역노동계의 주장을 수렴하는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 노동 분야 전문가는 "현재 지역노동계가 독소조항이라고 반대하고 있는 노사상생발전협정서 제1조 제2항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본다"며 "이는 투자자인 현대차와 지역노동계가 아닌, 핵심 운영주체인 광주시와 앞으로 합작법인에서 일하게 되는 노동자와 관련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역노동계가 합작법인의 투자자인 현대차를 합작법인의 경영주체로 보고 있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

현대차와의 협상팀 단장을 맡은 이용섭 광주시장은 11일 간부회의에서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일부 비판에 흔들리지 말고 시대정신과 시민만 믿고 담대하게 나갈 것"을 주문했다. 그는 "광주형 일자리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일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지역체 주도형 노사상생 모델이라서 예기치 못한 난관들이 많다"며 "그런데도 '상생협의회 결정사항의 유효기간'을 제외하고는 다른 쟁점들을 모두 합의한 것은 나름 성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사자 간에 신뢰만 회복되면 마지막 쟁점도 해결



하늘마당 밝힌 오색우산

연말년시를 맞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하늘마당에 오색 우산조명이 설치돼 시민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노사상생발전협정서 제1조 제2항은 "각 사업장별 상생협의회는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상의 원칙과 기능에 근거해 운영되도록 하고 신설법인 상생협의회 결정사항의 유효기간은 조기 경영안정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고려해 결정한다"로 수정 ▲3안 "결정사항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한다"로 수정 등을 조건으로 현대차와의 합동합의안을 결의한 바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지방선거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내일 만료

광주·전남 단체장·교육감 31명 중 10명 기소·수사중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사건 공소시효인 13일을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위기에 놓인 현직 지자체장들이 좌불안석이다.

11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이날 현재까지 광주·전남지역 광역·기초 단체장 및 교육감 31명 중 10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거나 재판 중이다.

이 가운데 김삼호 광산구청장, 이운행 합평군수, 김종식 목포시장, 강인규 나주시장 등 4명은 기소됐다.

이 중 자신의 치적을 홍보하고 현직 군수를 비판해달라는 취지로 지역 신문사

창간 지원금 5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운행 합평군수와 경선 전 불법 당원 모집 혐의로 기소된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과 징역 1년 2개월을 각각 선고 받은 상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나 폐지나

민관 TF 논의 시작... 내년 여름 전까지 마무리

정부가 여름철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개편 논의를 시작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11일 서울 팔레스 호텔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하고 누진제 개선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올 여름 사상 유례없는 폭염으로 전기료 '폭탄 청구서'가 쏟아지자 누진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커진 것을 반영한 조치다. TF는 학계, 국책연구기관, 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전력·소비자 전문가와 소비자·시민단체, 산업부·한전 등으로 구성됐다.

전기요금 개편이 국민 공감대가 필요한 시안인만큼 정부가 방향을 정하지 않고 민간위원 중심의 TF에서 개편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TF는 누진제의 성과와 문제점을 평가하고 토론회와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와 국회 협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최종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누진제 완화, 누진제 유지·보완은 물론, 누진제 폐지까지 포함해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력업계 등에 따르면 누진제 개편 논의는 현재 가장 적은 요금을 내는 1구간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크다.

현행 누진제는 전력 사용량이 200kWh (킬로와트시) 이하인 1구간에 1kWh당 93.3원을 적용한다. 2구간(201~400kWh)에 187.9원을, 3구간(400kWh 초과)에는 280.6원을 부과한다.

이에 따라 3개 구간을 2개로 줄이거나 누진제를 폐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그러나 정부가 2016년에 6개 구간을 3개로 줄였는데도 매년 누진제 논란이 반복하는 것을 고려하면 이번에는 누진제 폐지가 가장 현실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누진제를 폐지하고 단일 요금을 적용할 경우 1구간에 속한 소비자들의 전기요금이 오를 가능성이다.

앞으로 TF는 실태조사 내용과 해외 누진제 사례연구 등을 바탕으로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누진제에 대한 대안으로 계절과 시간대에 따라 요금을 차등하는 계시별 요금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NEW 한율 달빛유자 수면팩



잘 가, 피부 피로
잘 자, 내 피부

고통 유자 6개를 고스란히 담아 유자 비타C 콤플렉스™ 의 향산화력으로
피부피로를 싸악 풀어 다음 날, 생기 가득 환한 피부

